

“석탄화력 비중 30%로 줄이면 초미세먼지 30% 감소”

(2017년 43%→2022년)

(2022년)

현대경제연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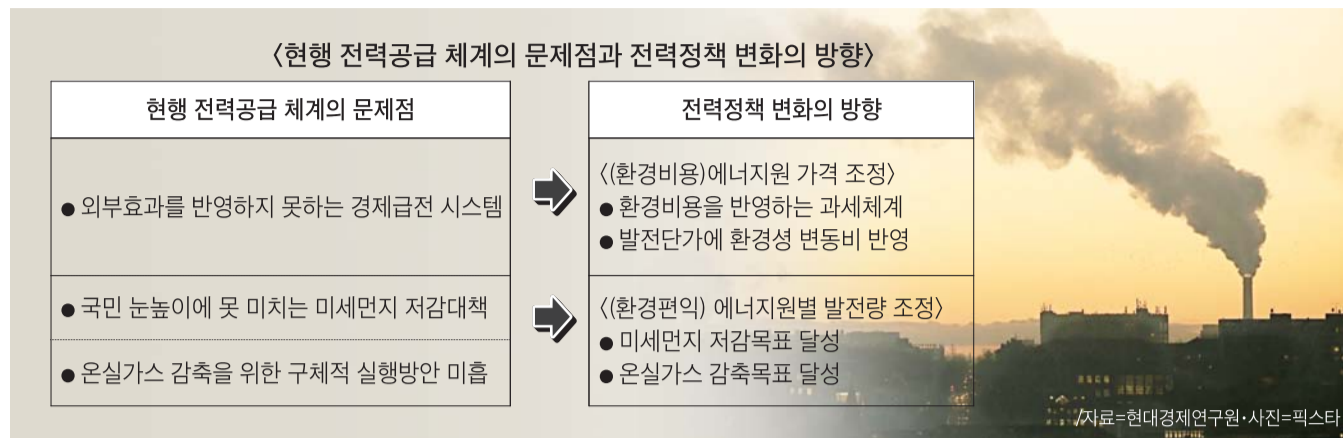
환경비용·편익 반영 시뮬레이션

세계 개편에 환경비용 반영하고 시장원리 따른 에너지전환 유도

전 세계적으로 석탄과 원자력에너지 사용이 감소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의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게되면 미세먼지 발생, 온실가스 배출 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30%까지 줄여야한다는 설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내놓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세계 개편에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 전력 공급 체계는 발전소별 가동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연료비가 최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있어 온실가스 등 추가적인 외부 비용은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보고서는 에너지원별 발전단가에 추가적인 환경성 비용을 반영함으로써 시장원리에 따른 에너지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제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량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석탄화력발

전 유류설비는 피크시즌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공급 예비전력(cold reserve)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발효와 함께 오는 2030년까지 국내의 3억 15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는 장기적인 감축 목표만 제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오히려 에너지전환 선언 이후 석탄화

력발전 비중은 증가했다. 2017년 석탄화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0%에 달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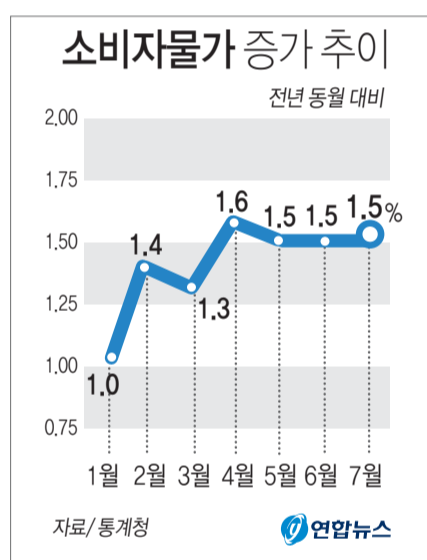
현대경제연구원이 환경비용·편익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2017년 43.0%에서 2022년 30.1%로 축소하고 원자력발전 비중은 26.8%에서 31.6%, 천연가스발전 비중은 22.2%에서 27.4%,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5.0%에서 9.7%로 각각 확대해야 한다.

이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는 지난해 대비 초미세먼지 30.2%, 온실가스는 15.4%가 각각 줄어들 수 있다. 단 한전 정산금, 가구당 월 부담액 등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다. 한전 정산금은 44조 7000만원에서 46조 8000만원으로 늘고 가구당 월 부담액은 3만 2100원에서 3만 3595원으로 1495원이 증가하게 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7월 소비자물가 1.5% ↑… 10개월째 1%대

경유값 14.6% 16개월 만에 최대 상승
콘도 15.6% 증가 등 여행 물가 올라



최근 폭염에 따른 채소류값 인상과 유가상승에도 소비자물가는 10개월째 전년 동월대비 1%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5% 높았다.

1년 전과 비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9월 2.1%에서 10월 1.8%로 낮아진 후 줄곧 1%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2.5% 오르며 전체 물가를 0.54%p 끌어올렸다.

경유 가격은 14.6%, 휘발유 가격은 11.8% 올랐다. 경유는 작년 3월(18.2%)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일 휘발유 가격 전국 평균은 l 당 1614.05원이고 최저가는 1518원, 최고가는 2298원이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2.2% 오르면서 전

체 물가를 0.72%p 높였다.

무엇보다 폭염에 휴가철이 겹치며 농축산물과 여행 관련 물가가 전월에 비례 눈에 띄게 올랐다. 채소류 물가는 6월보다 3.7% 상승했다. 전월과 비교한 채소류 물가 상승률은 2월 16.7% 이후 3~6월에 4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이달 반등했다.

휴가철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며 콘도 이용료(15.6%), 호텔숙박료(8.8%), 해외 단체여행비(7.5%) 등도 전월에 비해 올랐다.

세종=최신용 기자

폭염에 농산물값 급등…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

농식품부 농산물 도매가 6.5% 올라
생육 모니터링 강화하고 할인 판매
배추 日 100~200t 집중적으로 방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2주가 넘게 지속되면서 고온에 취약한 배추와 무의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주 정부가 가격 안정화 대책을 한 차례 발표한 데 이어 1일에도 대책을 발표했지만 폭염 장기화에 따라 급등세는 쉽게 잡히지 않을 전망이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 도매가격은 지난달 하순 기준으로 평년보다 6.5% 높게 형성돼 있다.

배추(포기당·이하 도매 기준)는 지난달 상순 1630원에서 중순 2650원까지 뛰더니 하순에 급기야 3500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평년보다 무려 50%나 높은 가격이다.

무(개당) 역시 지난달 상순 1128원에서 중순 1447원을 거쳐 하순에 2000원 선을 넘어 2026원까지 뛰어올랐다.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66%나 비싼 수치다.

고랭지 배추와 무의 주산지인 강원 태백·정선·강릉지역을 보면 지난달 중·하순



폭염이 이어지면서 채소류 물가가 전월대비 3.7% 상승했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채소류 매대. /연합뉴스

평균 최고기온인 32.5도를 기록해 평년 28도를 크게 웃돌았다. 강수량은 평년 117mm의 12%에 불과한 15mm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1주일 전인 지난달 23일에도 브리핑을 통해 폭염으로 배추·무 가격이 올라 비축물량을 하루 100~150t씩 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40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열흘도 안 돼 비슷한 내용의 발표를 재차 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무·배추는 생육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비축 물량 방출, 조기 출

하, 할인 판매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배추는 비축 물량을 하루 100~200t 집중적으로 방출하고, 채소가격안정제를 활용한 출하 조절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배추와 무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대체품이라 할 수 있는 얼갈이배추와 열무도 상승세를 보인다. 다만, 생육 기간이 짧아 지난달 하순부터는 평년보다는 낮은 시세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물건너간 상고법원, ‘판결문 공장’ 전략?... “대법관 늘리고 전문성 키워야”

“대법원 부서 세분화해야 효율성 ↑”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문건이 구설에 올랐지만, 상고심에 몰려드는 사건 숫자는 해마다 늘고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보고서 파일 196개를 공개했다. 문건에는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언론 등에 대한 전방위 로비를 계획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14년 8월 31일자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관련’ 문건에는 “일반 국민들은...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며 국민 수준을 폄하하는 분석이 담겼다.

2015년 7월 13일자 ‘상고법원 입법추진 법무부 설득방안’에서는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를 포함한 검찰 조직 확대 등 ‘법무부 빅딜’ 카드도 적혀있었다.

같은해 1월 5일에 작성된 ‘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추진동력 확보방안 검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보좌진이 친 검찰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발상의 전

환’으로 청와대를 입법 주체로 끌어들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담겼다.

이번 문건 공개로 사법부가 전방위로 추진하던 상고법원은 앞으로 도입이 어려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추진한 상고법원이 고위 법관 통제와 법원 장악 등 사법농단으로 지목됐지만, 대법원에 물리는 엄청난 사건 수는 여전히 과제라는 지적이다.

대법원의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8년 2만 8040개였던 상고심 사건 수는 2009년 3만 2361개를 기록했다.

이후 사건은 점차 늘어나 2016년 4만 3694개로 경증 뛰었다.

같은 해 처리된 사건 수 4만 3129개를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합친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나눠 계산하면, 1년 동안 한 사람이 봐야 할 사건 수가 3317건에 이른다. 대법원이 ‘판결문 공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학계에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원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고 요건이 미비할 경우 각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얼마나 적절히 활용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방식도 있다. 대법관 수가 두 배 늘면 부담이 반감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변호사는 물론 검찰도 전문화되는데, 판사는 민사와 형사를 맡다가 노동 관련 재판을 하는 식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역시 민사와 형사로만 나누지 말고, 민사 1~2부·노동부·조세부 식으로 전문화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대법원 사건 수의 증가는 결코 상고법원제도 도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일단 대법관 수를 두 배 정도 늘리되, 대법관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법종 기자 jiker@